

시민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김 태 완

<요약문>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민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여러 요인을 이용하여 이론적 차원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시민의 비선거적 정치참여는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지역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비선거적 정치참여에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젊은 세대일수록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수준은 매우 저조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불균형과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출의 증가, 지역정치의 활성화, 지역 이슈의 개발과 지역 여론의 형성에 주목하는 지역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며, 민주화 이후 성인이 된 젊은 세대가 그들만의 독특한 정보전달과 소통 방식을 통해 고유한 참여문화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의 모색 등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정치참여, 비선거적 정치참여, 경제상황 평가, 민주화 이후 세대, 구조방정식 모형

I. 들어가며

‘Democracy is not a spectator sport’라는 경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김비환(2004)에 의하면,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른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대두한 서구의 신좌파(New Left) 세력이 중앙집권적 복지국가, 관료주의적 억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반영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나 정권에 대한 시민불복종, 분권과 분리주의 등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정

* 이 논문은 2015년 21세기정치학회 하계 특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492).

치사회적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현우 2004), 점차 엘리트중심의 정치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의 상황은 여전히 시민대중의 정치참여를 강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불안요소의 해소를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치참여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에 의해 강조되어왔는데, 달(Dahl 1971)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참여와 경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는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정치로 해석된다면, 정치적 결정에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민주주의 본질의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장수찬(2005)도 정치참여를 민주주의의 질적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참여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으나(Kim 1980), 민주화 이후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과 2005년에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재등장하여, 이후 ‘촛불 시위’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김육 2013, 29).

하지만, 기존의 많은 논의는 정치참여의 다양한 유형 중 주로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나 투표 참여에 대한 분석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도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어떠한 요인이 개인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이하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정치참여의 유형과 그 영향요인을 상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을 판별해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II. 이론적 논의

1. 문헌검토

1) 정치참여의 정의와 구분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를 펼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정치참여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 유형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주로 초기의 논의는 정치참여를 매우 국한시켜 좁은 개념으

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파악한 반면, 후기로 갈수록 정치참여의 의미가 확장되어 다양한 유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정치의 영역이 제도권 내에서 이른바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정의와 유형을 벗어나는 정치적 행위가 발생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너(Weiner 1971)는 정치참여에 대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업무의 행정에 영향을 주며, 정치지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는 ‘정부의 공직자 선출이나 정부의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반 유권자의 합법적인 행동’을 정치참여로 본 반면, 헌팅턴과 넬슨(Huntington and Nelson 1976)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자율적 참여와 동원된 참여 모두’를 정치참여로 보았다.

밀브래쓰와 고엘(Milbrath and Goel 1977)은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을 정치참여로 규정하였고, 패리 외(Parry et al. 1992)는 정치참여를 ‘공공정책의 형성,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일반 시민들의 행동’으로 보았다. 최근의 논의에서 로젠스톤과 한센(Rossonstone and Hansen 2003)의 경우,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 박찬욱(2005)은 ‘시민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이나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위’ 등으로 정치참여의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

정치참여의 개념 규정에 따른 정치참여의 구분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대표적인 구분형태로서 기존의 정부나 의회 등의 제도권 내 정치영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여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구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서는 전자를 ‘관습적 또는 전통적(conventional)’ 참여, 후자를 ‘비관습적 또는 비전통적(unconventional)’ 참여로 구분한다(Milbrath and Goel 1977; Barnes and Kaase et al. 1979; 주인석·이진석 2012; 송경재 2014).

반면, 정치참여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여, ‘합법적 참여’와 ‘불법적(비합법적) 참여’로 구분하는 형태도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전자를 ‘제도적 참여’, 후자를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한 김병준(1994)의 구분도 이러한 구분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의 구분형태로,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로 인한 참여행위와 정당이나 정치인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동원에 의해 발생하는 참여를 구분하여, 전자를 ‘시민주도형 참여’, 후자를 ‘엘리트주도형 참여’로 구분하는 형태도 있다(Inglehart 1990). 김욱·김영태(2006)는 참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참여비용이 적은 것을 ‘쉬운 참여’로, 비용이 많은 것을 ‘어려운 참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2)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이른바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SES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나 사회인구론적(socio-demographic) 특징에 주목하여 각각의 특징에 의해 정치참여의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정치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 각각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정치참여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²⁾

두 번째 영향요인은 정치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다루는 연구는 정치참여를 사적 이해관계나 선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개인이 정치영역을 통해 얻게 되는 인식이나 가치체계 등에 주목하였다. 국내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주로,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강경태 2005; 박찬욱 2005; 장수찬 2005; 김혜정 2010), 정치효능감(장수찬 2005; 김혜정 2010; 류태건 2011; 김욱 2013), 이념적 성향이나 정당성향(강경태 2005; 박찬욱 2005; 류태건 2011; 김욱 2013), 시민적 의무감(김혜정 2010; 김욱 2013), 탈물질주의 가치관(김욱 2013), 정부나 정당에 대한 신뢰(주인석·이진석 2012; 류태건 2012) 등에 따른 정치참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연결성이나 유대감 등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주목한 연구(박찬욱 2005; 장수찬 2005; 김욱 2013)도 있으며, 1990년대의 인터넷 게시판, 2000년대의 ‘아고라’, 그리고 최근의 SNS 사용 등에 주목하여 인터넷 사용과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송정재 2014).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치참여를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반 시민의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특정 분야나 제도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은 광의의 정치참여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가 이러한 정의를 채택한 이유는 최근의 사회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현대의 사회는 예상하기 힘들만큼 다양한 루트의 인간관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전수준은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의사소통과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기준에 의해 정치라는 영역을 닫거나, 미증유의 사안을 미

1) 참여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을 위한 시간, 비용, 노력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2) 연령의 경우, 어떠한 유형의 정치참여를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다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비관습적 참여’와 같이 최근에 등장하는 새로운 참여유형에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더 높게 발생하기도 한다. 잉글하트(Inglehart 1979)는 이러한 차이가 젊은 세대의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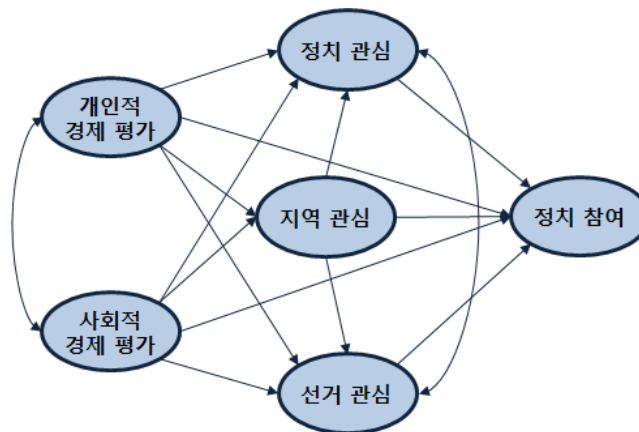
리 예측하기보다는 열린 개념으로 모든 행위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 규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참여에 대한 광의의 개념 규정으로 인해, 본 연구는 정치참여에 대한 구분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는 투표참여나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외한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주목한다.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주목하는 이유는 선거는 정치라는 영역에서 주기를 가지는 일종의 사건(event)에 해당되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와는 그 원인과 과정이 매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 중 상당수가 투표나 선거참여에 편향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김옥(2013)을 포함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선거참여와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해 상이한 영향요인이 발견되는 등,³⁾ 선거참여와의 구분을 통해 비선거 정치참여에 국한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가 투표나 선거에의 참여보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광의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이러한 정치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의 모색과 달리, 본 연구는 상관관계의 확인을 통해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하지 않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가정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통해 어떠한 요인을 변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정치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1>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구성된 이론모형



3) 박찬욱(2005)은 정치참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해당하는 유형만을 정치 참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3개 문항 이상으로 측정된 요인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요인 구성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다음으로, 검증된 요인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모형에 포함된 요인 간 경로계수의 검증을 통해 요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상정한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되는 다섯 개의 요인이며, 이들로 구성되는 이론모형은 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하나의 범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정치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에 해당한다.⁴⁾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으면서 두 관심 요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요인을 상정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김혜정(2010) 등의 선행연구에서 정치참여에 대한 관련성이 분석되었으며, 일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국가나 사회전체를 범위나 대상으로 하는 정치, 선거 등에 대한 관심에 선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⁵⁾

다른 하나의 범주는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요인으로,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⁶⁾ 두 요인은 구조적으로 가장 하위에 위치하며, 상위에 있는 모든 요인의 원인으로 상정되었다.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다른 요인의 원인으로 상정된 것은 일반 시민의 개인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의 경제사회에서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생계나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지역사회, 정치, 선거 등에 관심을 가지거나, 나아가 정치참여를 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이다.⁷⁾ 이상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 관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1>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지역사회·정치·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나아가 비선거적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이다.

-
- 4) 경영학이나 마케팅, 정보처리 등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AIDA 이론(주의[Attention]-관심[Interesting]-욕구[Desire]-행동[Action])’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행동을 유발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5) 많은 선행연구에서 투입되었던 정치효능감 요인이 본 연구의 분석에 빠져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 조사문항에 정치효능감이 빠진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인과관계를 상정하지 못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는 일종의 교호관계(relation of alternation)로,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높은 정치참여도를 보이지만, 잦은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6)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투표참여에 주목한 연구에서 개인경제지향(pocketbook)이나, 사회지향적(sociotropic) 시각으로 다루어지거나, 투표행태에 주목한 연구에서 전망적(prospective) 또는 회고적(retrospective) 투표행태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 7) 결국, 본 연구가 시민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정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목하는 것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요인이다.

- <가설 1-1-2>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지역사회·정치·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나아가 비선거적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이다.
- <가설 1-2>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정치·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나아가 비선거적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이다.
- <가설 1-3-1>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이다.
- <가설 1-3-2>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부가적인 영향요인을 찾는 것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도출된 SEM 모형에 포함된 요인들과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여러 영향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 정치적 이념성향과의 관련성,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등을 검증하게 되며, 관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2-1>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개인의 성(性)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 <가설 2-2>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개인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 <가설 2-3>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개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 <가설 2-4>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 <가설 2-5>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개인의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 <가설 2-6>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개인이 가입한 사회단체의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 <가설 2-7>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개인의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개인이 가입한 사회단체의 수와 종교는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입단체가 많을수록 단체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연결성과 유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고, 종교의 유무도 종교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자본을 예상한 것이며, 장수찬(2005), 김옥(2013)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한 것이다.

SEM 분석에 포함된 요인의 요인점수와 각 가설별로 측정된 변인 간의 다중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이상의 7가지 가설을 검증한다. 이후 채택되는 가설에 따른 변인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SEM을 이용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III. 자료의 수집과 측정

1. 문항의 개발 및 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정치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 패리 외(Parry et al. 1992), 류태건(2011) 등의 분류를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비선거 유형의 정치참여 8가지로 구성하였다.⁸⁾ 각각 ‘권리침해에 대한 반발’,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접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 ‘SNS 등에 정치적 의견표명’, ‘정치적 집회나 시위에 참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인이나 기자와의 접촉’, ‘정치후원금 납부’ 등의 적극성을 측정하였고, 모든 문항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한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⁹⁾

본 연구에서 정치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된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요인의 측정을 위한 문항은 앞서 언급한 정치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인과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첫 번째, 정치적 관심에 해당하는 3개의 문항으로, 각각 ‘일반적 정치관심’, ‘정치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 ‘정치관련 대화에 대한 적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선거에 대한 관심에 해당하는 3개의 문항으로, 각각 ‘공약에 대한 관심’, ‘전화여론조사 호응정도’, ‘후보토론회, 정당토론회 시청 정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에 해당하는 5개의 문항으로, 각각 ‘거주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내 발생 문제에 대한 관심’, ‘지역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 ‘지역공약에 대한 관심’, ‘지역 이슈나 시사에 대한 관심’ 등을 측정하였다. 네 번째, 개인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2개의 문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적 경제상황’과 ‘개인적 경제상황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은 ‘소득재분배에 대한 평가’, ‘소득분배 주력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 ‘소득불균형에 대한 평가’, ‘실업률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측정하는 문항과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정치적 이념성향,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가입한 사회단체의 수, 그리고 종교를 묻는 문항 등도 추가되었다.

2. 조사설계와 표본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정치경제실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해당 조사는 1993년 12월 19일 이전에 출생한 부산지역 남·여 유권자를 대상으로, 2012년 5월 1차 예비조사, 12월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확정된 설문문항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보충조사를 실시하여 완료

8)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는 투표, 선거운동, 이익집단 활동, 의회·공무원 접촉, 집단행동 등 5가지의 유형으로 정치참여를 분류하였고, 패리 외(Perry et al. 1992)는 버바와 나이의 유형에 정치적 폭력을 추가하여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류태건(2011)은 인터넷 영역을 추가하여, 투표, 선거활동, 공공활동, 사적 접촉, 항의활동, 인터넷 정치참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9) 이하의 다른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도 모두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되었다.

조사표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¹⁰⁾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추계인구¹¹⁾를 바탕으로, 성·연령·지역(자치구·군별)에 따른 비례층화추출(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앙선거위가 발표하는 선거인수 정보에는 연령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바탕으로 성·연령별 범주를 정하고, 구·군별 선거인수 정보를 통해 각 범주별 표본구성의 비율을 보완하였다.

총 487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결과를 입력(coding)하여, 데이터 정화(purification) 과정을 거쳤다. 데이터 정화는 이후 분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응답이 많은 사례(case)와 ‘마하라노비스의 거리(Mahalanobis distance)’ 개념을 이용하여 다변량극단치를 가지는 사례를 확인하여 기준치($\chi^2=52.62$ [df=25], $p<0.001$) 이상의 값을 가지는 사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²⁾ 정화를 거쳐 확정된 435개 최종표본의 기본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최종 표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06	47.4	학력	중졸 이하	14	3.2
	여자	229	52.6		고졸	145	33.4
	소계	435	100.0		대제 이상	275	63.4
연령	20대	78	17.9	정치성향	소계	434	100.0
	30대	85	19.5		진보적	137	31.5
	40대	86	19.8		중도	165	37.9
	50대 이상	186	42.8		보수적	133	30.6
	소계	435	100.0		소계	435	100.0

실제 조사에서는 출생년도를 응답받았고, <표 1>의 연령대별 집단은 2013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여 범주화한 것이며, 평균연령은 43.79세로 집계되었다. 또한, 정치적 이념성향은 ‘나의 정치성향은 보수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을 바탕으로 1, 2점은 진보적, 3점은 중도, 4, 5점은 보수적으로 각각 범주화한 것으로, 1점은 23명, 5점은 31명 등으로 각각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이나 가족의 소득을 묻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가구의 실질적인 월 평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였다. 가구원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기본현황.” <http://info.nec.go.kr/>(검색일: 2013. 3. 10).

11) 국가통계포털. 2012.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ZTITLE&parentId=A(검색일: 2013. 3. 10).

12) 아울러, 각 문항 응답결과의 정규성, 선형성,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1인당 월평균소득은 응답자를 포함한 동거가족들의 월 평균 소득을 묻고, 동거가족의 수를 물어 계산하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3.84명, 가구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평균 124만 6,576원으로 집계되었다.¹³⁾

IV. 분석 결과

1. 요인의 구성

먼저,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8개의 정치참여 유형에 관한 문항과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5개의 요인,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될 구조방정식 모형의 도출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요인과 문항을 포함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고, 그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표 2> 요인별 최종 문항구성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최종 문항	요인 적재치	Cron.'s α	CFR	AVE
정치 참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 기자 등과 접촉한다.	.80	.83	.81	.51
	SNS 등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다.	.72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준다.	.68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다.	.65			
정치 관심	정치관련 뉴스나 기사를 잘 살펴본다.	.89	.87	.93	.77
	나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다.	.87			
지역 관심	선거 시 각 후보의 지역공약을 비교·비판한다.	.86	.84	.92	.73
	언론의 지역 뉴스나 기사를 보려고 노력한다.	.85			
사회적 경제 평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에 주력해야 한다.(역순)	.73	.77	.75	.50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이 심하다.(역순)	.71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역순)	.67			

최초 CFA 모형의 적합도는 상당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요인 적재치가 0.5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하여 다른 요인에 대하여 10 이상의 수정지수

13) 통상 실질적인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파악해야만 한다. 하지만, 조사시간과 응답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월평균 가처분소득에 최대한 가까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을 계산하기로 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486,2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참고로, 통계청에 발표한 2013년 1/4분기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은 4,192,600원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3. “가계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1/index.board?bmode=read&aSeq=306001[검색일: 2013. 9. 10]).

를 보이는 문항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요인 내 문항 간 오차항의 공분산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CFA 모형의 수정을 시도하였다.¹⁴⁾

수정작업을 통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경제상황 평가’ 등 2개의 요인 전체와 ‘정치 참여’ 요인의 4개 문항, ‘정치에 대한 관심’ 요인의 1개 문항, ‘지역에 대한 관심’ 요인의 3개 문항, ‘사회적 경제상황 평가’ 요인의 1개 문항 등, 총 14개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적합도는 매우 개선되었다.¹⁵⁾ 수정 CFA 모형에 의해 최종적으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결과는 위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각 문항이 해당 요인을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2> 참조),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검증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든 요인에서 0.77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복합요인 신뢰도(Composite Factor Reliability: CFR) 검증¹⁶⁾ 결과, 모든 요인의 CFR 검증값은 0.75~0.93에서 분포하였으며, 평균추출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검증¹⁷⁾ 결과에서도 모든 요인의 AVE 검증값이 0.50~0.77에 분포하여 각 요인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CFA 모형에 의해 추출된 요인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유모수추정 모형과 상관계수(correlations) 등가제약 모형 간 χ^2 값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¹⁸⁾ 검증 결과, 자유모수추정 모형의 χ^2 값은 110.475(df=35)로, 상관계수 등가제약 모형($\chi^2=384.924$ [df=41])에 비해 274.449만큼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df=6, $p<0.001$). 이를 통해 각 요인의 판별타당도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의 구성 결과, 8가지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 중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인이나 기자와의 접촉’, ‘SNS 등에 정치적 의견표명’, ‘정치후원금 납부’, ‘정치적 집회나 시위에 참가’ 등,

14) 다른 요인과의 수정지수가 10 이상인 문항을 제외한 것은 요인 간의 단일차원성 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며(Segars 1997; 박재진·이정교 2006, 71에서 재인용), 오차항의 공분산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각 문항 간, 또는 요인 간 공분산이 있다고 전제하여 그들 오차항 사이의 공변량을 자유화시킴으로써 부합도를 높인다는 의미이다(김계수 2005).

15) CFA 모형의 적합도는 아래 표와 같다.

모형	RMR	RMSEA	GFI	AGFI	NFI	TLI	CFI	PNFI	PCFI
기준치	$\leq .08$	$\leq .08$	$\geq .90$	$\geq .90$	$\geq .90$	$\geq .90$	$\geq .90$	$\geq .50$	$\geq .50$
최초 CFA	.132	.120	.651	.563	.736	.726	.762	.638	.661
수정 CFA	.054	.070	.956	.916	.959	.955	.971	.610	.618

16) CFR 분석은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이 해당 요인의 성격을 표현하기에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요인 별로 ‘요인적재치의 합² / (요인적재치의 합² + 측정오차 분산의 합)’으로 계산되며, 측정오차 분산은 ‘1 - 요인적재치²’으로 계산되고, CFR의 기준치는 ‘0.7 이상’이다.

17) AVE 검증은 ‘요인적재치²의 합 / (요인적재치²의 합 + 측정오차 분산의 합)’으로 계산되며, 기준치는 ‘0.5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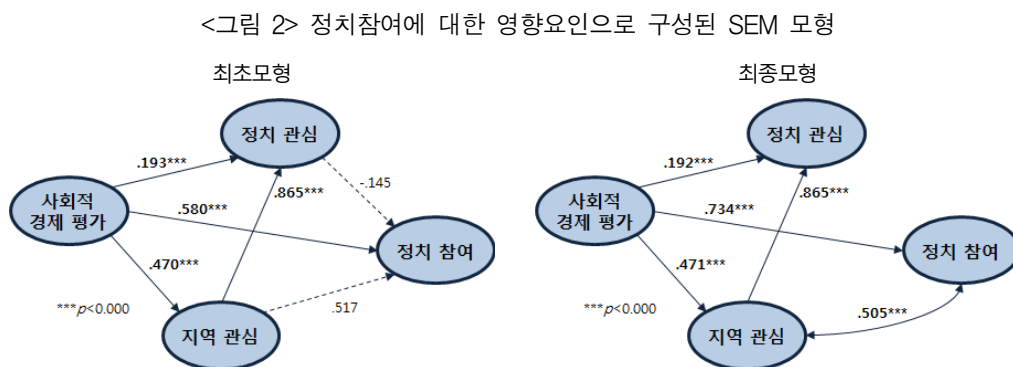
18) 자유모수추정 모형은 각 요인 간 상관계수가 자유롭게 추정되는 모형이고, 상관계수 등가제약 모형은 각 요인 간 모든 상관계수를 1.0으로 제약한 모형이다. 자유모수추정 모형의 χ^2 값이 상관계수 등가제약 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경우, 각 요인 간 상관정도가 낮으며, 판별타당성을 확보한다고 본다(Segars 1997; 박재진·이정교 2006, 73에서 재인용).

4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동질성을 가지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¹⁹⁾

영향요인으로 상정되었던 5가지의 요인 중,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선거에 대한 관심’의 2가지 요인은 4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3가지 문항으로 측정된 ‘사회적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각각 2가지 문항으로 측정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 등의 요인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후 분석에서는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앞서 제시하였던 연구가설 중 <가설 1-1-1>과 <가설 1-3-1>은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나머지 3개의 연구가설도 세부 내용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 요인에 대한 영향은 제외되게 되었다.²⁰⁾

2. 최종 모형의 도출

앞서 2장에서 제시한 이론 모형에 대해 CFA 결과에 의해 도출된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요인을 투입하여 정치참여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출하였고(아래 <그림 2>의 왼쪽 모형),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최초 도출된 모형에 포함된 요인 간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요인은 정치에 대한 관심 요인($\beta=0.193$, $p<0.000$),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요인($\beta=0.470$, $p<0.000$), 정치참여 요인($\beta=0.580$, $p<0.000$) 등 세 요인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요인은 정치에 대한 관심 요인($\beta=0.865$, $p<0.000$)에는

19) 4가지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구분, 즉 관습적·비관습적, 합법적·불법적, 시민주도·엘리트주도, 쉬운·어려운 등의 기준으로는 구분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

20) 비선거적 정치참여와 선거에 대한 관심 간에 관련성이 낮은 것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후 모형에서 제거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문항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나타냈지만, 정치참여 요인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beta=0.517$, $p=0.233$)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 요인에서 정치참여 요인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0.145$, $p=0.764$).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의 두 요인이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의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2개의 경로를 통과하는 3개의 간접효과, 즉 ‘사회적 경제평가 → 지역관심 → 정치관심 → 정치참여’, ‘사회적 경제평가 → 지역관심 → 정치참여’, ‘지역관심 → 정치관심 → 정치참여’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은 5% 유의수준의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과 경로계수를 이용한 대표적인 매개효과 검증방법인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모든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사회적 경제평가’는 ‘정치참여’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를 줄 뿐, ‘지역관심’이나 ‘정치관심’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없으며, ‘지역관심’도 ‘정치관심’을 매개로 하는 ‘정치참여’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 모든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고, Amos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수정을 시도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약간 개선된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위 <그림 2>의 오른쪽 모형).²¹⁾ 최종적으로 도출된 모형을 바탕으로 각 요인 간 효과를 파악해보면, 상정된 모든 요인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경로에 포함된 간접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²²⁾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beta=0.471, p<0.000$), 정치에 대한 관심($\beta=0.192, p<0.000$), 정치참여($\beta=0.734, p<0.000$) 모두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개의 요인의 변화에 대해 원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지역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4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1-2>는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2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RMR	RMSEA	GFI	AGFI	NFI	TLI	CFI	PNFI	PCFI
최초 SEM	.051	.066	.961	.924	.964	.961	.976	.596	.603
최종 SEM	.051	.064	.961	.926	.964	.963	.976	.613	.621

22) 최종 모형에 포함된 각 요인의 효과분해는 아래 표와 같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 경제평가 → 지역관심	.471 ***	.407 **	.471 ***
→ 정치관심	.192 ***		.599 **
→ 정치참여	.734 ***		.734 ***
지역관심 → 정치관심	.865 ***		.865 ***

p < 0.005, *p < 0.000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을 가정한 <가설 1-2>와 <가설 1-3-2>는 채택될 수 없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4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4가지 유형의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결정하는 데에 정치적 관심의 증감은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4가지 유형의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과 교호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즉 지역의 관심이 높을수록 4가지 유형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4가지 유형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부가적 영향요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요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하는 여타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요인별 요인점수와 변인 간 다중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요인점수는 위 <표 2>에 제시된 요인별 문항응답치의 평균값을 의미하며,²³⁾ 분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다중상관관계 분석결과(종속변인: 정치참여)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s.e.	β	공차	계수	s.e.	β	공차	계수	s.e.	β	공차
상수	.107	.107			.382	.189			.411*	.206		
정치관심	.099	.053	.146	.256	.087	.052	.128	.251	.086	.053	.127	.246
지역관심	.223***	.056	.291	.288	.260***	.056	.340	.281	.256***	.057	.335	.268
사회적 경제평가	.357***	.049	.340	.707	.372***	.050	.354	.666	.374***	.051	.356	.641
남자D					.097	.068	.056	.969	.088	.070	.051	.920
연령					-.010**	.003	-.146	.794	-.010**	.003	-.150	.773
대졸D					.038	.081	.021	.776	.036	.082	.019	.771
가구원당 소득					-.000	.000	-.014	.978	-.000	.000	-.016	.969
이념성향(보수)									-.006	.036	-.006	.893
가입단체 수									.012	.020	.026	.843
종교있음D									.004	.074	.002	.862
<i>F-value</i>	94.040***				44.271***				30.817***			
<i>R</i> ²	0.437				0.463				0.463			
<i>adj. R</i> ²	0.432				0.452				0.448			

* $p < 0.05$, ** $p < 0.005$, *** $p < 0.001$

23) 각 요인점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i>N</i>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비선거적 정치참여	435	1.00	4.50	1.817	.853
정치에 대한 관심	435	1.00	5.00	3.000	1.221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435	1.00	5.00	2.802	1.092
사회적 경제상황 평가	435	1.00	4.33	2.192	.830

먼저, <표 4>의 [모형 1]에 해당하는 4개의 요인점수만을 투입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요인점수를 일정하게 통제했을 때 4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요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요인($b=0.223$, $p<0.000$),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요인($b=0.357$, $p<0.000$)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정치에 대한 관심 요인($b=0.099$, $p=0.061$)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모형 2]에 해당하는 4개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3개 요인점수의 계수는 [모형 1]과 동일한 방향성과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 순서를 유지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b=0.099$, $p=0.268$)이, 연령이 적을수록($b=-0.010$, $p=0.001$), 고졸 이하 집단보다 대졸 이상 집단($b=0.022$, $p=0.789$)이, 가구원당 소득이 적을수록($b<-0.000$, $p=0.712$) 4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연령 변수의 유의미성만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념성향과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3가지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7개의 변수는 기존 [모형 2]와 유사한 크기와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였고, 정치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b=-0.006$, $p=0.877$), 가입한 사회단체의 수가 많을수록($b=0.012$, $p=0.532$), 종교를 가진 사람($b=0.004$, $p=0.960$)이 4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요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요인, 연령 등, 3개의 변수가 정치참여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여타 변수의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을 가정한 7가지 연구가설 중, 연령에 따른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의 차이를 가정한 <가설 2-2>만이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라 정치참여의 적극성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만43세 이하(1969년 이후 출생)’ 집단($N=180$)과 ‘만44세 이상(1968년 이전 출생)’ 집단($N=255$)으로 구분하여,²⁴⁾ 두 집단의 모형에서 확인되는 요인 간 계수의 임계비(Critical Ratio: CR) 비교를 실시하였다.

CR 비교의 결과, 양 집단의 두 모형은 ‘사회적 경제평가 → 지역관심’의 경로계수($t=-3.104$, $p<0.001$)와 ‘지역관심 ↔ 정치참여’의 상관계수($t=-4.633$,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

24) ‘만 43세 이하’의 집단은 이른바 절차적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사람으로, ‘만 44세 이상’의 집단과는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컴퓨터를 비롯한 I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와 사회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소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박찬욱(2005)은 젊은 세대의 진보적 이념성향,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전 세대에 비해 민주적 가치와 실천에 익숙한 점 등을 들어 젊은 세대의 높은 정치참여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정부시기를 거치면서 강화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었다. 구체적으로는 ‘만43세 이하’ 집단 모형의 ‘사회적 경제평가 → 지역관심’의 경로계수($\beta=0.568$, $p<0.000$)와 ‘지역관심 ↔ 정치참여’의 상관계수($\beta=0.847$, $p<0.000$)가 ‘만44세 이상’ 집단 모형의 ‘사회적 경제평가 → 지역관심’의 경로계수($\beta=0.328$, $p=0.001$)와 ‘지역관심 ↔ 정치참여’의 상관계수($\beta=0.203$, $p=0.071$)보다 다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표 4> 참조). 또한,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효과크기도 ‘만44세 이상’ 집단의 모형에서 확인되는 효과크기는 ‘사회적 경제평가 → 정치관심’에서 0.520이었으며, ‘만43세 이하’ 집단의 모형은 0.654로 그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연령집단에 따른 요인 간 계수 차이

구분			만43세 이하					만44세 이상				
			계수	표준	SE	C.R.	p	계수	표준	SE	C.R.	p
경로	사회적 경제평가	→ 지역관심	1.110	.568	.174	6.394	.000	.430	.328	.134	3.209	.001
		→ 정치관심	.341	.152	.115	2.958	.003	.372	.248	.111	3.363	.000
		→ 정치참여	.913	.725	.137	6.651	.000	.663	.677	.124	5.356	.000
상관	지역관심	→ 정치관심	1.016	.885	.066	15.313	.000	.949	.830	.100	9.465	.000
		↔ 정치참여	.457	.847	.078	5.849	.000	.062	.203	.034	1.803	.071

결국, 연령에 따른 4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의 차이는 구조적으로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의한 지역에 대한 관심의 영향이 연령별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집단에서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정치참여의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을 때 정치참여에의 적극성이 나이가 많은 집단에 비해 많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시민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그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개선시키거나, 상관관계가 높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 효과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V. 마치며

본 연구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기 위해 시도되었다. 특별히 범위와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반 시민의 모든 행위를 정치참여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선

거와 같은 일시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참여행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 주목하였다.

투표나 선거과정에서의 참여를 제외한 정치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여러 요인을 이용하여 이론적 차원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으로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8가지 유형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한 적극성,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3문항,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3문항,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5문항,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2문항,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4문항 등, 25개 문항으로 측정된 6개의 요인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인·기자와의 접촉’, ‘SNS 등에 정치적 의견표명’, ‘정치 후원금 납부’, ‘정치적 집회·시위 참가’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시민의 비선거적 정치참여는 소득분배 주력 정책, 소득불균형, 실업률 등 3가지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에 따라 비선거적 정치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여러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연령에 따라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적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연령집단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성인이 된 민주화 이후 세대와 이전 세대 간에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적극성을 결정하는 정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적극성 간의 관련성 등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상당히 저조한 수준(평균 1.817점)에 머물렀던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원인은 정치권의 무능이나, 무의미한 경쟁에 대한 혐오로 인한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불균형과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 사회가 소득분배에 주력해야 한다고 느끼는 시민의 부정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높은 관련성을 볼 때, 지방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정부의 논리나 정권심판 등을 강조하는 등,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사라지고 있는 지역정치의 현실도 낮은 정치참여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 시민의 의무감 등을 내세워 시민사회의 성숙을 기다리는 미온적인 조치보다는 시민사회가 경제상황에 대해 안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소득불균형과 실업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패배자를 다시 북돋아 또 다른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영역에서는 지역사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지역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주민자치, 학생자치, 각종 단체자치에서부터 지역정치의 싹이 돋아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 이슈의 개발과 지역 여론의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화 이후 성인이 된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참여에의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이들은 민주화 이전의 정치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이들만의 독특한 정보전달과 소통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들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만의 고유한 참여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서 사회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후의 지역사회와 정치영역에 주체가 되어야 할 이들 세대가 경쟁에 몰입된 경제논리에 좌우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들의 탈정치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향후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적 귀결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강경태. 2005. “부산시민 정치참여 수준 및 구조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5집 3호, 227-248.
- 김 욱.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16권 2호, 27-59.
- 김 욱·김영태. 2006.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 대전과 목포 지역 젊은이의 가치정향과 정치 참여.” 『정치·정보연구』 제9권 1호, 179-202.
- 김계수. 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주)데이터솔루션.
- 김병준. 1994.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서울: 법문사.
- 김비환. 2004. “참여민주주의 정의와 이론.” 『의정연구』 제10권 1호, 5-32.
-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3호, 83-104.
- 류태건. 2011.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1집 3호, 383-416.
- . 2012. “정치참여와 정치신뢰: 그 유형의 다양성과 관계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273-308.

- 박재진·이정교. 2006.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 측정 지수개발 및 타당성 검증.” 『광고연구』 제73호, 61-79.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4집 1호, 147-193.
- 송경재. 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는 참여적인가?: 미국의 정치참여 유형과 SNS.”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3호, 59-94.
- 이현우. 2004. “참여민주주의 제도화의 이념과 방향.” 『의정연구』 제10권 1호, 33-55.
- 장수찬. 2005. “개인의 네트워크 자원과 정치참여 수준: 대전지역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1호, 141-171.
- 주인석·이진석. 2012. “반(反)정당감정의 기원과 정치참여형태: 부산, 광주광역시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5집 1호, 147-176.
- Barnes, Samuel H., Max Kaase et al.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 Dahl, Robert A. 1971. *Poli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and Joan M. Nelson.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Chong Lim. 1980.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obilized Voting.” in Chong Lim Kim. 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Santa Barbara, CA: Clio Books.
- Milbrath, L. W.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2nd ed. Chicago, IL: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Parry, Geraint, George Moyser and Neil Day.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Longman.
- Segars, A. 1997. “Assessing the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A paradigm and illustration with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Omega*, 25(1), pp. 107-121. Elsevier.
- Sidney Verba and Norman H. Nie. 1972. *Political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논문접수일 : 2015년 10월 31일
수 정 일 : 2015년 12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30일

- 김태완은 2014년 부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선거 및 정당정치)이고, 최근에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19대 총선 집합자료를 이용한 당선 가능성 예측과 투표율의 상관관계 분석”(『21세기정치학회보』 2012)과 “이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결정요인: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2015, 공저) 등이 있다.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Non-electoral Participation of Citizens

Kim Tae Wa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non-electoral participation which i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t assumed the theoretic caus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and tri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o verify this. As a result, the structure which non-electoral participation of citizens w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ssessment of the economic situation was observed. The structure which the more positive the assessment of the economic situation was, the higher interests about community and politics were, and the more actively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non-electoral political behaviors was observed. In addition, the more young citizens were, the mor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m. The level of non-electoral participation were very low. To overcome this realities, it may be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spending to overcome income inequality and unemployment. It may need the activation of local politics, local press's effort to develop local issue and to form regional opinion. And it may be necessary to find alternatives that make post democratization gener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their indigenous participatory culture through their unique information delivery and communication.

Key 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non-electoral participation, assessment of the economic situation, post democratization gener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